

서
리
크
리

기출은 미래다! 10년간 기출을 완벽 정제한

2025
2020
2015

기출을 돌아보다
합격을 향해 달린다

2026
김종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01 총론 · 정책 · 조직

필수전환 이후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완벽 반영

이공이육 김종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9·7급 통합)을 펴내며

기출은 미래다, 행정학 기출혁명

행정학에서 기출문제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기출문제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대한 행정학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고 앞으로의 출제경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학 커리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2026 기출문제 선행정학은 합격생과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아래와 같이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26 김종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의 특징이자 강점은

첫째, 9·7급 등 모든 공무원 행정학을 위한 통합 기출집입니다.

여러 시험을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9급, 7급, 국회, 경찰, 군무원, 공사·공단 등 다양한 행정학 시험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각종 기출문제의 경계를 뛰어넘어 정제·분석·수록하여 2026 기본서 체제에 맞추어 전 2권으로 통합·출간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기출문제와 개정법령을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에 대하여 출제 당시와 달라진 제도 개편, 최근 법령개정(「정부조직법」, 「주민투표법」,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국가회계법」, 「지방자치법」 등)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의 적절히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재시생들을 위하여 종전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뿐 아니라 최근 공기업이나 군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일부 수록하고 최근에 치러진 2025 국회8급, 국가9급, 지방9급 문제까지도 모두 분석·수록하였습니다.

셋째, 1,600여 문제를 엄선·정제하였습니다.

최근 10여년간의 1,600여 문제를 엄선·정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성이 없어졌거나, 유사·중복되거나, 1회성 문제나 재출제가능성이 없는 문제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재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로만 엄격히 정제하여 최종 1,600여 문제(7급용 100제 포함)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문제의 연결이나 흐름상 공백이 생긴 것은 전혀 아니며, 단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쳤습니다. 따라서 양적으로는 분량이 약간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퀄리티가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넷째, 이론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론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 이론과 정리표를 등을 배치함으로써 이론단계에서 이해 못한 부분들을 기출단계에서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다섯째, 100% 전 지문 해설을 달았습니다.

해설과 정리를 최대한 간결하고 명쾌하게 수록하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틀린 지문은 물론, 옳은 지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설을 제시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당 지문이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특히 대충 정답에만 꿰맞춘 듯한 성의 없는 해설로 일관된 시중의 다른 교재들과 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명쾌한 해설을 제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논란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들을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승부하였으며, 잘못된 해설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을 배려하여 카스파(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글들을 바탕으로 다른 교재의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바로잡아주는 개방적이고도 과감한 해설을 시도하였습니다. 행정학의 필수과목화에 대비한 고득점전략을 위해서 해설의 폭과 깊이를 한층 보강한 것입니다.

일곱째, 정답을 찾아가는 경로와 암기법을 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하거나 자주 틀리거나 빈번하게 질문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답 제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과 경로를 알려주어 실수하지 않고 패턴별로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중규쌤팁”란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수업때 강조했던 암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는 암기법 **善** 까지 도 표기해두었습니다.

여덟째, 합격생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행정학 교재로 공부해온 합격생들이 아쉬워 했던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여 개선하였고, 합격생들이 문제를 풀어갔던 과정이나 아이디어를 수험생 눈높이에 맞추어 합격생 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홉째, 기본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리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표와 함께 첨삭 형식으로 보충설명을 곁들여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기출집이 기본서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열번째,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로 강조하였습니다.

고득점의 여부를 결정짓는 헛갈리거나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문제 하단에 눈에 잘 띄게 주의형식으로 처리하여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최근 높아진 난도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9급 필수과목 전환과 7급 PAST 도입 이후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최근 빈출되고 있는 고난도 법령문제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마다 난이도와 중요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경중을 가려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난이도와 중요도는 다릅니다. 중요도는 앞으로 재출제가능성 등을 감안한 문제의 중요도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도이고, 난이도는 해당 문제를 푸는데 요구되는 실력이나 기술, 틀리는 빈도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험생 여러분들로 하여금 흔히 시험에 임박할수록 중요한 문제보다 자주 틀리는 문제(난도 높은 문제)에 치중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난이도보다 중요도가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주 틀리는 문제(중요하지 않은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 위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은 합격생들과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분량과 편집, 편집형식, 수록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2026 기출집 원고 교정에 열과 성을 다해준 고마운 제자·조교들(은선, 유리, 소정)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저절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정성에 정성을 다한 이공이육(2026) 김중규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으로 행정학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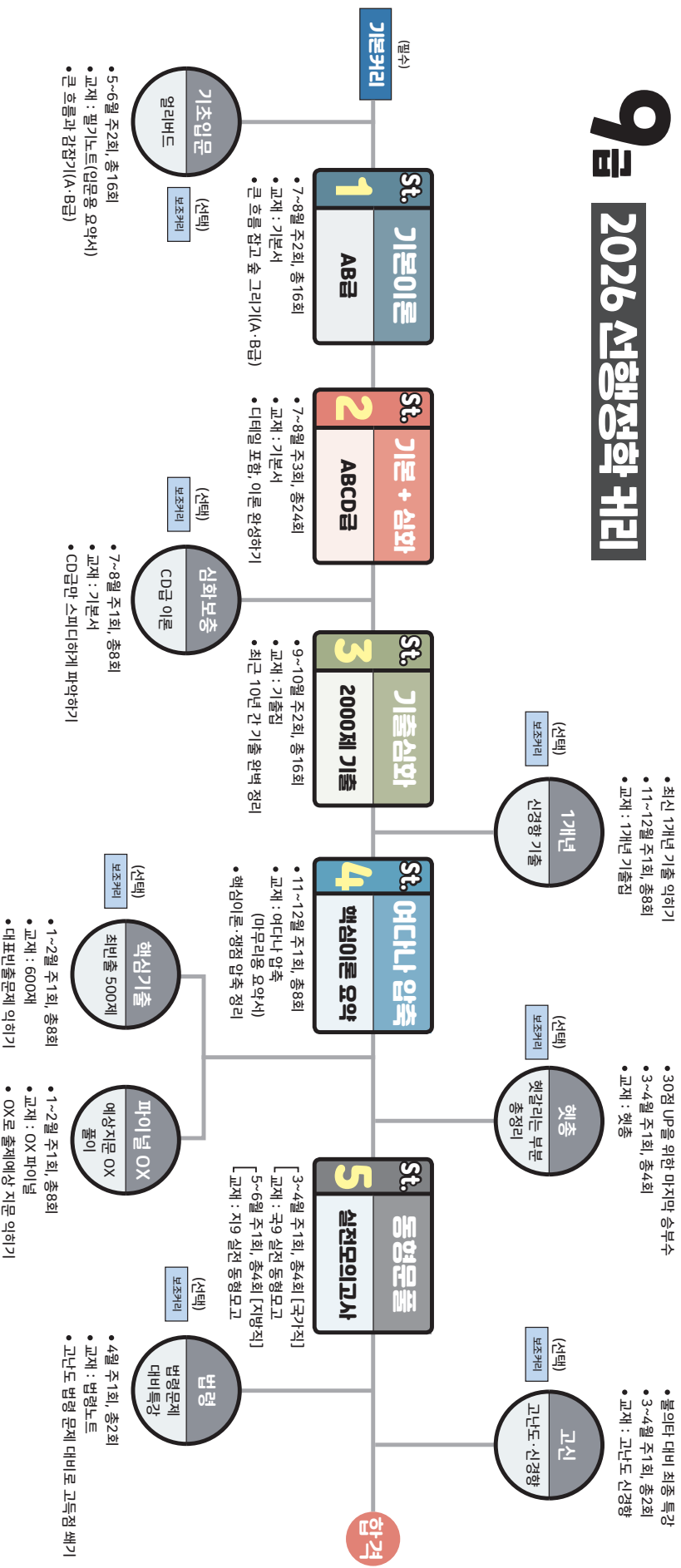
책은 쓰는 대상이 아니라 친구이고, 책을 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믿음이 사라진 사회이긴 하지만 수험서까지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수험생의 1분 1초를 아껴주는 정성과 마음을 만나보세요.

2025.6.20. 카스파 연구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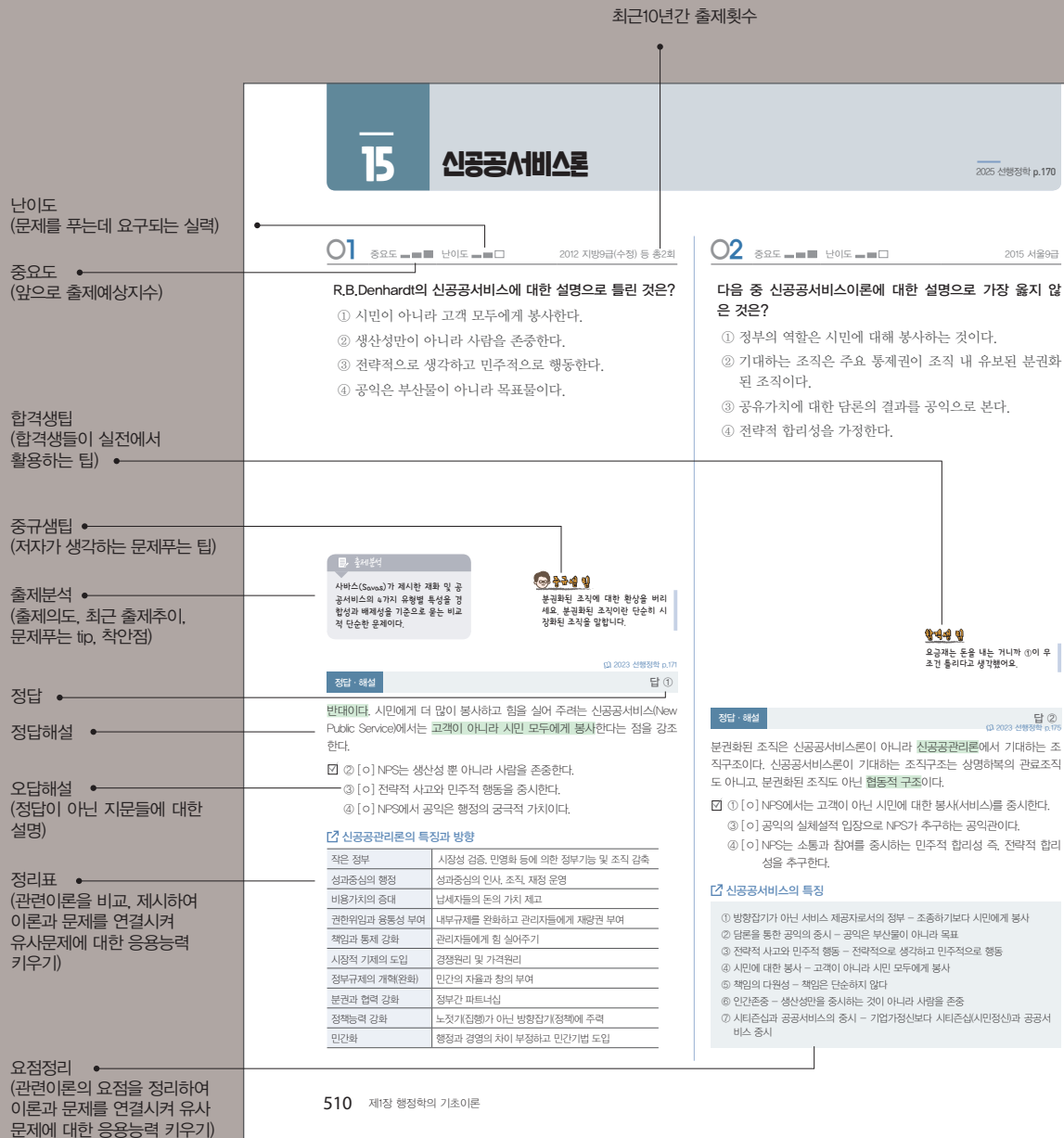
지은이 김중규

9급

2026 시행정화 커리



이 책의 페이지 구성과 특징



17

중요도 ■■■ □ 난이도 ■■■ □

2021 경찰간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6 선행정학 p.59

정답·해설

답 ①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완화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 ② [○]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여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방규
- ④ [○] 규제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18

중요도 ■■■ ■ 난이도 ■■■ □ □ (정답률 83%)

2025 지방9급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2026 선행정학 p.59

정답·해설

답 ④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기술 및 신제품 출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존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완화하여주는 제도이다.

- ☑ ① [×]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 ② [×]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키한을 법정화하고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5년을 주기로 한다.
- ③ [×] 포지티브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규제**에 해당한다. 네거티브규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형식이다.

☞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 ①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
- ② 규제최소주의: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제 등은 곤란하며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③ 규제일몰제도: 규제존속시한(원칙적으로 5년 이내)을 설정하여 규제목적 달성 후에는 규제의 폐지를 강제.
- ④ 규제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 신설 또는 강화.
- ⑤ 규제영향분석: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가져올 각종 영향(비용·편익 등)을 사전에 파악.
- ⑥ 규제등록제도: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규제샌드박스
- ⑦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신기술 활동 서비스 규제시 네거티브 규제, 제품출시 후 규제 등 우선 고려.
- ⑧ 규제유예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 유예.
- ⑨ 신사업규제정비기본계획: 3년마다 규제개혁위가 수립.
- ⑩ 규제개혁위 설치: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25인으로 구성, 대통령 소속(사무지원은 총리실 규제조정관).
- ⑪ 행정부에만 적용: 의원입법 등 적용 X.

38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05 중요도 ■■■ 난이도 ■■■□

2024 지방7급

넛지(Nudge)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라 시장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한다.
- ②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보다는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을 지향한다.
- ③ 정부의 역할 및 정책수단으로서 선택설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 ④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을 방지한다.

2026 선행정학 p.174

정답 · 해설 답 ③

넛지정부에서의 정부역할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선택(옵션) 설계자로서의 부드러운 개입이다.

- ☑ ①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는 맞지만, 시장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하는 것은 넛지이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적 개입형식**이다.
- ② [×] **반대이다**. 신고전파 경제학 등 이론적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을 지향하기 보다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을 지향한다.
- ④ [×]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행동적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넛지방식과 같은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고전파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비교

구분	신고전파 경제학	행동경제학
인간관	• 완전한 합리성 • 경제적 인간	• 제한된 합리성 • 이타성 · 호혜성(사회적 분능, 사회적 선호) • 심리적 인간
의사결정 모델 (선택행동이론)	• 효용극대화 행동 • 기대효용이론(효용합수)	• 만족화 행동, 휴리스틱 ¹⁾ • 전망이론(가치합수) ²⁾
연구방법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
정부 역할의 근거와 목적	•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 · 공급	• 행동적 시장실패 •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 (행동변화)
정책 수단	법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	넛지(선택설계)

1) 휴리스틱은 알고리즘과 달리 시행착오적인 대응행동으로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시스템 ①(직관적 대응에 해당)
2) 전망이론은 정통경제학과 달리 효용보다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보다 손실의 극소화를 더 중시한다는 카너먼의 이론(2002노벨 경제학상)

06 중요도 ■■■ 난이도 ■■■□ (정답률 70%)

2025 지방9급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 (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 (strategie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 ②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 ③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2026 선행정학 p.173

정답 · 해설 답 ①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모형을 제시하며 공공가치 창출을 강조한 학자는 보즈만(Bozeman)이 아니라 **무어(Moore)**이다. 보즈만은 공공가치실패론을 주장하였다.

- ☑ ② [○] 신공공서비스론은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 ③ [○] 뉴거버넌스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치를 강조한다.
- ④ [○]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강조한다.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직접성 ② 강제성
③ 효과성 ④ 가시성
⑤ 자동성

2026 선행정학 p.190

정답 · 해설

답 ③

Salamon은 1980년대 이후 정부정책이 직접적인 정책에서 간접적인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것에 주목하여 정책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 등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직접성과 강제성 기준을 사용하였고 자동성과 가시성을 부수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자동성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시성이란 예산과정 등이 가시적인지 여부이다. ③의 **효과성은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과성은 정책수단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효율성, 형평성, 정당성 등과 함께 정책수단의 **선택 기준(평가기준)**에 해당한다.

☞ 정책수단의 분류기준과 선택기준(Salamon)

강직-효형

분류기준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
선택(평가)기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정당성

☞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영향 (Salamon)

대소정(보)공경

수단		영향				
직접성	종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성	정당성
낮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 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험, 직접 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소비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영향 (Salamon)

강제-사경

수단		영향				
강제성	종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성	정당성
낮음	손해책임법, 정보 제공, 조세지출	낮음	중간	낮음	중간	높음
중간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기업, 대출보증, 직접대출, 계약, 벌금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간
높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높음	높음/낮음	높음	낮음	높음/낮음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경제적 규제
② 조세지출
③ 직접대출
④ 공기업

2026 선행정학 p.190

정답 · 해설

답 ②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공기업 등은 직접성이 높은 직접수단에 해당하고,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로 직접성이 낮은 간접수단에 해당한다.

☑ ①③④ [×] 모두 직접 수단에 해당한다.

☞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 직접성 기준

최근 문헌

직접성	수단	개념
간접적 수단	손해책임법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보조금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시 생산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지급보증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정부가 보증
	기업지원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
	바우처	빈곤층 소비자에게 쿠폰(이용사은권)을 지급
	조세지출	조세감면에 의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행을 지원
	계약(위탁)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생산을 민간에게 위탁
	사회 규제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벌금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패널티 부과
	부과금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불이익(부담)을 주는 교정적 조세
직접적 수단	공적보험 ¹⁾	유사시에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직접대부	정부가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게 직접 대출
	경제규제	민간의 경제활동을 직접 규제(인허가 등 진입규제)하여 집행
	공공정보	정부가 민간에게 공적정보를 직접 제공(공개)
	공기업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의하여 정책을 집행
	정부소비	정부가 공적조직을 만들어 예산으로 직접 시행

1) 전통문헌은 공적보험을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소정(보)공경

03 중요도 ■■■ 난이도 ■■■

2018 국가9급

살라몬(L.M.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ㅂ. 보조금(grant)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2026 선행정학 p.190

정답 · 해설

답 ③

Salamon은 직접성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있는데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만 묶여진 것은 ㄴ. 경제적 규제, ㄷ. 정부소비, ㅁ. 공기업이다.

- 조세지출
- ☑ ㄱ [x]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로 직접성이 중간이다.
 - ㄴ [o] 진입규제, 독과점 규제 등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높다.
 - ㄷ [o] 정부소비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사용하여 시행(공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성이 높다.
 - ㄹ [x]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달리 직접성이 중간이다. 바람직한 사회질서는 사회적 자본이나 분위기 조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성이 높지 않다.
 - ㅁ [o] 공기업은 정부소유의 기업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성이 높다.
 - ㅂ [x] 보조금과 바우처 등은 민영화된 방식으로 직접성이 낮다.

04 중요도 ■■■ 난이도 ■■■ (정답률 74%)

2025 지방9급

베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규제적 도구
- ② 종교적 도구
- ③ 경제적 도구
- ④ 정보적 도구

정답 · 해설

답 ②

고전적인 정책수단 3분법으로 규제(채찍), 경제적 유인(당근), 설득(정보)이 있다. 베딩(Vedung)도 1998년 「정책수단, 채찍 · 당근 · 설교」에서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3분화하였다. 즉 규제적 도구(강압과 처벌), 경제적 도구(보조금 등 유인 제공), 정보적 도구(설득 등 정보 제공)로 구분하였다. 흔히 설득(정보)은 은유적 표현으로 설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종교적 도구는 아니다.

베딩(Vedung)의 정책도구 3분류

구분	정책수단	개념	강제성
규제적 도구(채찍)	규제적 수단	법령, 제재, 벌금, 의무부과 등	높음
경제적 도구(당근)	재정적 유인 수단	보조금, 세금 감면, 장려금 등	중간
정보적 도구(설득)	정보 · 설득 수단	캠페인, 교육, 공익광고, 계몽 등	낮음

15

중요도 ■■■ □ 난이도 ■■■ □

2018 지방7급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 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2026 선행정학 p.194

정답 · 해설

답 ③

경쟁적 규제정책은 많은 수의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 또는 집단에게 서비스공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정책으로,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면적 정책(hybrid policy)이지만 규제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정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이라고 하면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보다는 보호적 규제정책을 말한다.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이 **규제정책의 대부분**이며, 일반적인 정의에 가장 가깝다.

- ☑ ① [○] 배분정책은 철의 삼각을 매개로 로그롤링(밀어주기) 또는 포크배럴(갈라먹기)과 같은 정치현상이 나타난다.
- ②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갈등 및 이념 간 논쟁이 심하여 루틴화된 집행절차의 확립이 어렵다.
- ④ [○] 보호적 규제정책은 강제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으로부터 큰 반발이 나타나고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가능성이 높다.

16

중요도 ■■■ □ 난이도 ■■■ □ (정답률 87%)

2025 국가9급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 ② 공공요금 책정
- ③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 ④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2026 선행정학 p.194

정답 · 해설

답 ①

경쟁적 규제정책이란 특정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신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규제하는 형식의 규제정책이다. 따라서 항공노선 운항권 및 방송통신채널권 등의 부여가 이러한 정책사례에 해당한다.

- ☑ ② [×] 경쟁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은 국민 전체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해관계가 **작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 ③④ [×] 경쟁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

정책분류	개념	예시
배분정책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	사회간접자본 구축,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경쟁적 규제정책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경쟁범위를 제한하려는 정책(진입규제 등)으로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	TV나 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보호적 규제정책	민간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는 정책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재분배 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진지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사바티어(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② 정책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년 이내 단기간에 초점을 둔다.
- ③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 중재자(policy broker)가 중재한다.
- ④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된다.

2026 선행정학 p.270

정답 · 해설

답 ②

Sabatier는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 ① [○] Sabatier는 정책하위시스템을 정책이해의 중요한 단위로 삼고 있다.
- ③ [○] 정책옹호연합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 등 정책중재자(policy broke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④ [○]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에는 안정적 변수(문제 영역의 속성 등), 역동적 변수(사회경제여건의 변화 등)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책옹호연합모형의 분석적 틀과 구성요소

정책하위체제	신념체계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립적인 정책옹호연합(찬성연합과 반대 연합 등)들로 구성된 정책집행환경		
정책옹호연합	정책핵심신념을 같이(공유)하는 행위자들로 구성 ¹⁾		
신념체계	기본핵심 신념	모든 정책에 대한 근본적 관점 · 철학	쉽게 안 바뀜
	정책핵심 신념	모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전략	
	부차적 신념	특정정책의 집행기술, 예산 등	쉽게 바뀜
정책중재자	정책연합간 갈등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관료, 전문가 등)		
정책변수	안정적 변수	하향적 모형에서 도출된 변수(문제영역의 속성, 정책목표의 성격, 사회구조 등)	
	역동적 변수	외부적 변수, 장기간(10년) 영향(사회경제조건이나 여론의 변화 등)	
	매개변수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정치체제의 개방성 등)	
정책변동의 핵심경로 ²⁾	외부적 충격	정책하위체제 밖의 동태적인 사건	
	내부의 사건	정책하위체제 내의 충격과 사건	
	정책지향적 학습	정책연합의 신념체계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수정되는 과정	
	교섭된 합의	정책찬반연합들간 합의 도달	

1) 정책옹호연합은 입법부 의원 + 관료 + 이익집단 등 철의 삼각 구성원뿐 아니라 과학 기술정보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

2) 신념체계 및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01

중요도 ■■■ 난이도 ■■■

2008 지방7급 등 총7회

2026 선행정학 p.294

진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실험이다.
-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이들 두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관찰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 ④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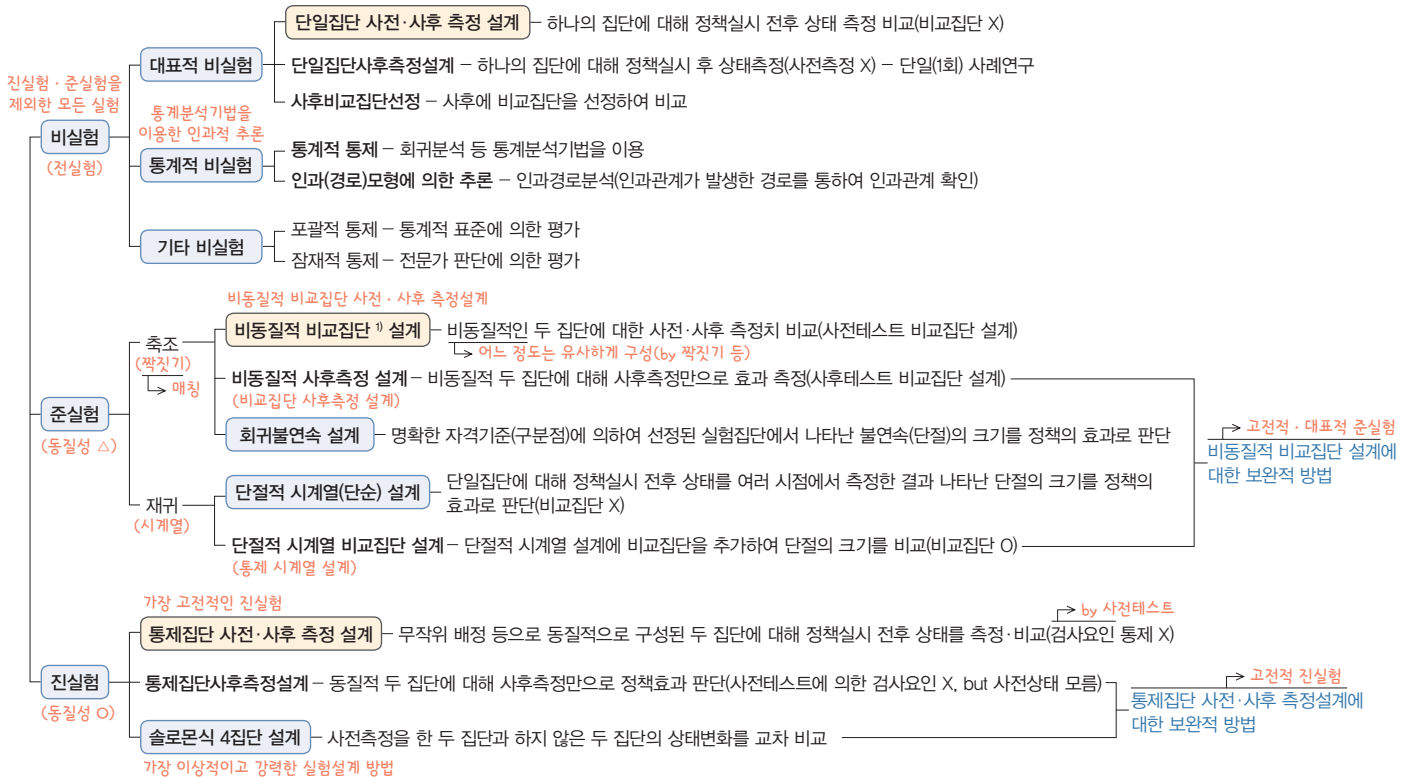
정답 · 해설

답 ②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실험으로 무작위 배정(홀짝 추첨 등)에 의하여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한다. 반면 준실험적 방법은 두 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으로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설계 또는 회귀불연속설계 등의 방법이 있다.

- ☑ ① [오] 진실험은 두집단간 동질성을 확보·유지하려는 인위적 실험이다.
- ③ [오] 진실험에서 동질성이란 두 집단이 실험기간 동안 구성상, 성질상, 과정상 동질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④ [오] 준실험은 두집단간 동질성을 완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유사하게 선정하기 위해 짝짓기 등을 이용하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사전테스트 비교집단 설계)나 사후특징비교집단 설계(사후테스트 비교집단 설계)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정체평가를 위한 실험의 종류



1) 준실험은 비교집단이 실험집단과 동질성을 갖추지 못하고 완전한 통제도 안 되므로 통제집단 대신 비교집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07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국회9급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와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실적주의 - 정치적 중립성
 ㄴ. 대표관료제 - 사회적 형평성 제고
 ㄷ. 엽관주의 - 행정논리
 ㄹ. 대표관료제 - 효율성 강화
 ㄴ. 직업공무원제 - 정치논리
 ㅂ. 엽관주의 - 국민 대응성 약화

- ① ㄱ, ㄴ ② ㄱ, ㅂ
 ③ ㄴ, ㄷ ④ ㄹ, ㅂ
 ⑤ ㄴ, ㅂ

2026 선행정학 p.460, 466

정답 · 해설

답 ①

ㄱ, ㄴ만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 ☑ ㄱ [○]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ㄴ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할당임용으로 적극적인 수직적 공평(결과와 공평)을 제고시킨다.
 ㄷ [×]엽관주의는 공직임용의 기준을 정치적 충성도에 두고 정치와 행정을 연계시켜 집권 정치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을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행정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중시한다.
 ㄹ [×]대표관료제는 공정성과 책임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2차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적주의와 달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ㄴ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 정권교체에 관계 없이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므로 정치논리보다는 행정논리에 의한 행정을 중시한다.
 ㅂ [×]엽관주의는 정권교체시 교체 임용 등에 의하여 관료집단이 정치 집단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이므로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참여성, 책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08 중요도 ■■■ 난이도 ■■■ (정답률 70%)

2025 지방9급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③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④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6 선행정학 p.466

정답 · 해설

답 ②

도입순서가 반대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3) → 전국지역인재추천채용제(2005) → 지방인재채용목표제(2007) 순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은 성별대표성을 상징하는 여성채용목표제(1996)에서 비롯된 양성채용목표제(2003)가 그 출발점이었다.

- ☑ ① [○] 우리나라 균형인사제도의 종류로 맞는 설명이다.
 ③ [○] 장애인구분모집제의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 [○] 대표관료제(균형인사정책)의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관료제를 정부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균형인사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요 균형인사정책

양성채용목표제 (2003 도입)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30% 미달시 추가 합격(1996 여성채용목표제가 시초)
장애인의무고용제 (1991)	정원 및 신규채용 인원의 3.8% 이상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07)	지방대 출신 의무고용제(5급 20%, 7급 30%)
지역인재추천채용제 (2005)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7급은 대졸자, 9급은 고졸자), 수습(인턴) 거쳐 정규직 임용
이공계출신채용목표제 (2004)	5급 채용인원의 40%를 이공계 출신 선발
저소득층채용목표제 (2015)	9급 채용인원의 2% 선발(7급 2.5%)

01

중요도 ■■■ 난이도 ■■■

2023 국가9급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2026 선행정학 p.613

정답 · 해설

답 ②

2001 IMF GFSM에 따르면 통합재정의 범위에 일반정부 부문(정부기관 및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기금 등)은 모두 포함되지만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공공비영리기관을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공부문 전체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합재정 포함범위가 2001 IMF GFSM(재정통계편람)의 적용으로 회계단위기준에서 일반정부 중심의 제도단위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변경되었으나 금융성기금 등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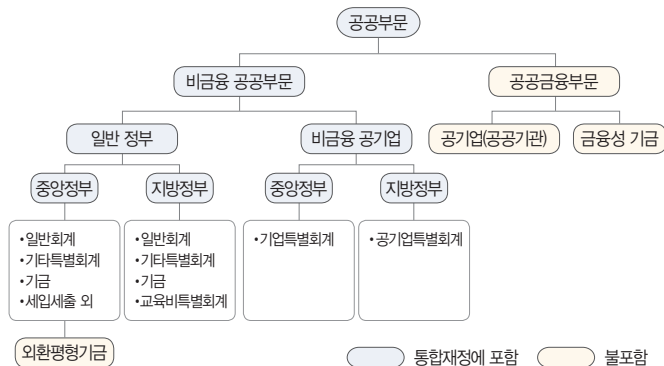
- ☑ ① [○] 세입과 세출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단기적·소모적 계정)와 자본거래(장기적·투자적 계정)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종합적 예산분류체계이다.
- ④ [○] 정부재정 전체의 순수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계형식으로 작성된다.

통합예산의 구비조건(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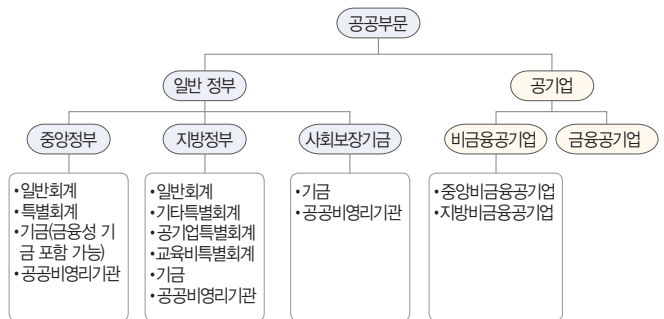
- ① 포괄성: 중앙정부 + 지방정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② 이중거래의 차감: 회계간 중복분(내부거래)을 차감하여 계상하는 예산순계기준으로 표시
- ③ 대출순계의 구분: 용자나 용자금의 회수와 같은 대출순계(순용자)의 별도 표시¹⁾
- ④ 보전재원의 명시: 재정적자가 어떤 형태로 보전되고 재정흑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시

1) 용자금의 지출을 재정적자 요인으로, 용자금 회수를 재정흑자 요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통합재정의 범위(회계단위기준, 1986 IMF GFSM) - 종전



통합재정의 범위(제도단위 기준, 2001 IMF GFSM) - 현재



통합재정수지 작성방식 및 기준 변경(2018)

구분	1986 GFSM	2001 GFSM
분석단위	회계단위(재정기능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포함)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 수행하는 모든 활동 포함)
통계기록방식	현금주의(현금의 흐름만 포함)	발생주의(자산, 부채의 기록 ¹⁾)
포괄	금융성 기금 등 제외	포함(원칙) ²⁾
범위	공공비영리기관 제외	포함

1) 우리나라는 아직 수정현금주의(Modified Cash Basis) 기반

2) 포함여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개별국가가 자율 판단(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성기금 등 제외)

주의

[통합재정수지의 범위와 기준]

IMF 2001 GFSM 자체와 우리나라의 실제 적용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2001 GFSM]	[우리나라]
분석단위(제도단위)	○	○
작성방식(발생주의)	○	△(수정현금주의)
금융성기금 포함	○	X
공공비영리기관 포함	○	○

O4 중요도 ■■■ 난이도 ■■■

2022 국회9급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 기금 모두 국회 결산 심의의 대상이다.
- ②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모두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 ③ 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 ④ 집행절차 측면에서 예산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하여, 기금의 경우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 ⑤ 기금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운용평가 등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2026 선행정학 p.615

정답 · 해설

답 ②

주의하여야 한다. 2001 IMF 재정통계편람에 따르면 금융성기금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포함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개별국가가 자율판단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단순금융거래의 성격을 띠는 금융성 기금(8개)과 외환평형기금을 제외시키고 있다. 즉 ②의 경우 IMF 2001기준 상으로는 맞는 지문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을 묻은 것이므로 틀리다고 보아야 한다.

- ☑ ① [○]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 역시 국회의 결산 심의 대상이다.
- ③ [○]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기본적)인 지출에 충당하는 회계이다.
- ④ [○] 예산은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
- ⑤ [○] 「국가재정법」 제62조~제85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제82조)이 규정되어 있다.

☞ 정보화 기술 관련 용어 정리

업무재설계 (BPR)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조직의 활동이나 업무 전반적인 흐름과 절차를 분석하고, 조직목표에 맞도록 사업과 절차를 근본적·최적적으로 다시 설계하여 구성하는 것
혼합현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환경이나 시각화 등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
정보자원 관리	정부내 모든 정보자원(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보안, 인력, 조직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제3의 플랫폼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플랫폼과 달리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플랫폼
인공지능(AI)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빅데이터	대량의 정형·반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사물인터넷 (IoT)	모든 기기 및 사물에 통신모듈을 적용·탑재하고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들간 인터넷을 유무선으로 연결해주는 기술
브로드밴드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 → 공대역통합무선통신망
시맨틱웹	컴퓨터가 사람처럼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또는 인공지능웹을 말함.
블록체인	거래기록을 분산·공유시킴으로써 집중화된 데이터관리에 폐단(왜곡, 조작 등)을 해소하기 위한 탈집중적 데이터 관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IT자원(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IT자원 분산공유시스템,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행정시스템의 분권화에 기여

30

중요도 ■■■ □ 난이도 ■■■■ (정답률 42%)

2025 지방9급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 ③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026 선행정학 p.758

정답·해설

답 ③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장, 신념, 명분, 담론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무리 특강인 법령특강과 동형모고에서 유사한 문제와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 ☑ ① [○]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② [○]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 동법의 소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1.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3

중요도 ■■■ □ 난이도 ■■■■ (정답률 59%)

2025 국가9급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 ②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 ④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2026 선행정학 p.787

정답 · 해설

답 ③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지방이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부정한다'는 표현은 틀리다.

- ☑ ① [○]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권력내부변수들만 강조하는 기존의 엘리트이론이나 다원론 등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 등 외부경제상황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② [○] "발로하는 투표"를 의미하는 티부모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 엘코크(Elcock)의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예측관계로 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지방정부 권력이론의 변천

1. 다원론과 엘리트이론

- (1) 다원론 : 동등한 접근기회를 갖는 이익집단이 정책을 주도, 정부는 중립 · 심판관, 선거가 중요한 장치
- (2) 엘리트이론 : 소수 지배계층이 정책을 주도

2. 신다원론과 신엘리트이론

- (1) 신다원론 : 정부가 전문적 · 능동적으로 주도, 이익집단의 동등한 접근기회 부정, 우월적 집단 존재, 정부내부 기구분화가 중요
- (2) 신엘리트이론 : 무의사결정론(엘리트가 기득권에 대한 도전적 주장을 기각 · 방치)

3. 도시한계론

피터슨(Peterson)은 경제사회적 환경 등 지방정부의 외생변수가 지방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 도시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이 증대되고, 세수가 확대되며, 정부서비스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정부는 도시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은 최소화함. 즉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발정책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저소득계층에 편익을 제공하는 재분배정책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것. 다원론이나 엘리트이론 등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폐쇄적인 권력체제의 연구였으나 피터슨의 경우 도시한계론에서 내부요인보다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 등 외생변수를 강조.

4. 성장기구론과 레짐이론

- 다원론 · 엘리트이론 등 행위자들의 권력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폐쇄적 권력구조론과 경제사회 · 환경 등 외생변수를 강조한 도시한계론을 결합
- (1) 성장기구론 :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성장연합이 이용가치를 중시하는 반성장세력을 누르고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 설명
 - (2) 레짐이론 : 내생변수(도시정부, 공식행위자)와 외생변수(민간부문, 비공식행위자)간 협력 및 상호작용 중시

07

중요도 ■■■ 난이도 ■■■ (정답률 85%)

2025 지방9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 선행정학 p.807

정답 · 해설

답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결을 거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이다.
- ②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며, 단체장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의회가 선출한다.

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승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법인 여부	법인	법인
조직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관계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가능) • 지방자치단체조합장 * 조합장 : 규약에 따라 선임 (구성단체장이 겸직 가능)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결기관) (구성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 특별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 * 특별자치단체장 : 의회에서 선출 (구성 단체장이 겸직가능)
설립, 해산 명령	명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권고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08

중요도 ■■■ 난이도 ■■■

2024 국회8급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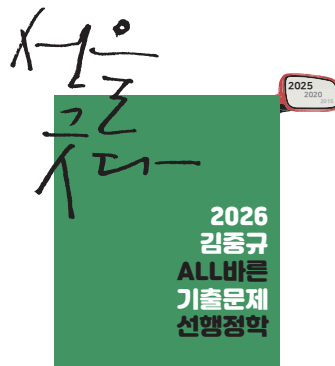
2026 선행정학 p.807

정답 · 해설

답 ③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밖에 없다(「지방자치법」 제204조)

- ☑ ①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 ②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제199조).
- ④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99조).
- 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01조).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5년 6월 30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75-9
ISBN 979-11-92405-74-2 (세트)
값 47,000원 (전2권)

